

기초단체·의회 “脫정치” 거센 요구

시군구의회 의장협,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 촉구

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도 “선거법 개정하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정치권의 간섭을 없애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공천제에 따른 폐해가 해소될 지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당공천제와 중선구제는 여야 정당 간 앙합의 산물로 부패 정치의 원인이며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 지역 간 갈등과 분열 등을 조장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또 이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강진군지회가 강진군민회관에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지회를 결성하고 다음달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본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지방분권국민운동·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으로 이뤄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해 끊임 없는 공천비리와 잡음,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 엘리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졸속기라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여야 각 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즉각 결정·공표하고 선거개정 협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지난해 출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정당공천이 없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도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정당공천이 실행되고 있다”며 “공연히 정당공천제를 시비할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인 정당 문화의 제질을 개선해야”며 정당공천 존속에 무게를 두는 등 정치권의 입장이 제각각이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논의한 지방선거 제도개편 방향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첫 도입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한 1995년 여야 협상에 의해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기초의원 공천은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됐지만 기초단체장 공천은 이후에도 생じ아 왔다.

기초단체장은 공천권을 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는가 하면 ‘공천 현금’을 강요받는 등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났으나 지역구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될 경우 현직 단체장의 물갈이와 효율적인 지역발전 전략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언제든지 野 만날 용의 있다”

한나라 박희태 대표

에 응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때와 장소, 형식과 의제를 가리지 않고 만날 용의가 있다”며 “모든 체널을 통해 당 대표를 비롯해 각급 레벨 회담을 제의해온은 만큼 야당이 원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특히 “노동조합도 올해 노사분규가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 달라”면서 “사용자와 노조, 책임 있는 정부가 한 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박 대표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만은 자제해달라”라며 “중소기업들이 감원 대신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나누기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임금의 4분의 3 까지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치권을 향해 “경제회생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정치가 디딤돌은커녕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서 “오늘부터 즉각 상임위별로 대화

이재오, 친이계 결속시킬까

내달 귀국… 친박계 반발 속 역할론 관심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후 역할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의 3월초 귀국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박장달 전 의원이 잇따라 북경을 방문, 만남을 가졌다는 데 이어 이나리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귀국에 대해 ‘환영 메시지’와 함께 ‘귀국 후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야당의 반발 때문에 의도대로 되지 않고 당내에서 조차 친박의원의 세력이 확산하는 등 친이 진영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시점임을 감안, 친이계의 구심력 회복을 위해 중요

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이상득-이재오-정두언 트리오 체제’ 또는 ‘이상득-이재오-투톱 체제’를 구축,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친이의 경우 2012년 대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가 불과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친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면서 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의 북귀에 대해 친박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친이계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상임위 본격 가동… 첫날부터 곳곳 충돌

與 미디어법 직권 상정 언급에 野 반발

용산사고 후속 조치 싸고 격론 벌이기도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19일 운영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함에 따라 곳곳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빚어지는 등 2차 ‘입법전쟁’이 본격화됐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고홍길 위원장이 미디어법 상정과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여야간 미디어법 상정 협의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 야당 의원들이 격화해 반발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날 최대 잣집법안인 미디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폐법 방지법’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부 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사일정 미합의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됐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들이 사전분쟁조정위원회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과정이 연출됐다.

법제사법위는 사형제 집행 논란과 청와대 ‘이매일 홍보자침’ 사건 등 용산사고, 변호사시험법 부결 후속조치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특히 용산 사고 후속조치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거론했지만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이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무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공청회에서는 진술인으로 나온 전문가들 사이에 잔반 공방이 벌어지면서 향후 관련법안 처리에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이날은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소득공제 이중신청, 논문 이중게재 의혹, 사외이사 지침 위반 등에 내정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날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008년 9월과 2009년 2월 정부 장·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등 322명의 인사통계를 비교해보면 영남 출신이 42.1%에서 45%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경부나 대각, 고속·고정부, S리인 인사, 영남 편중인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대회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대회에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법 개정안 2월 국회서 통과돼야”

한나라 박재순 최고위원



그는 또 “광주·전남도 작년 23개 조합장 선거에서 36건의 불·탈법 사례가 적발되는 등 농협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이 만연해 많은 폐단이 있었다”며 “정치적 이유로 농협법 개정 법률안이 미뤄진다면 수십 년을 끌어온 농협개혁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연합뉴스

장영달씨 법정 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청탁자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심리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능 정규종합반 모집

수능 최우수 드림팀 강사진 / 셔틀버스 운행 / 저녁 11:20분까지 의무 자율학습(일요일은 격주로 의무 자율학습) / 철저한 성적관리

인문계열 모집반

- 서울대+경찰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월 수강료: 47만5천원(평일 10교시+토요일5교시 월 26일 수업))

자연계열 모집반

- 의치한의대반(소수정원제)
- 교육대+연고대+사관학교반
- 전남대반



개강
2월반 2월 16일(월)
3월반 3월 3일(화)

★ 명예로운 학원생 ★

- 재수생 전체수석 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 00군 획득
- 광주 일등학원 자연계 선동일 군 (연세대 치대합격(20명 모집)/경중대치대/단국대 치대 합격)

www.kjildeung.com

광주
일등학원

02-227-2588

찾아오는 길 : 전남여고 후문과 동부경찰서 사이

NAVER | 광주일등학원 ▶ 검색!

= 정 확 한 합격 예 약!! 無等과 만나 세 요. =

7·9 급 공무원 對備 전문

을 적증문제풀이 4주 완성

국가 + 지방직

(영어) 10 기능직 (없는 종류)

일반 분석

국 사

박현길 교수

= 각 지방직 (시험 5월 23일)=
• 서울 903, 부산 251, 대구 100, 인천 583, 광주 119
• 대전 105, 울산 68, 경기 885, 강원 160, 충북 182
• 충남 348, 전북 208, 전남 238, 경북 214, 경남 318

개 강
3월 2일(주- 아동반 모집)
(현재 예약접수중)

소 방 직
• 사상 최다 모집 예정
• 단독반: 이정호 교수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42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9
• 충남 168, 전북 120, 전남 280, 경북 128, 경남 110

고등
의
名門

두동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둘째서 뒤
(중학교 후문)

222-4560

★ ★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 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 지원 선착순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